

무더위에 온열질환자 42일새 190명

7월 폭염특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3%↑

24% 운동장·공원서 운동회·마라톤 증발생

어린이·노인 취약… 술·커피·탄산음료 위험

7월 들어 폭염특보가 전국에 확대되는 등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 현황을 신고받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7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90명(사망 0명)이었다. 지난해 동기간 168명보다 22명(13.1%) 늘어난 숫자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을 보인다. 이를 방지했을 때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일사병(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발생장소는 운동장·공원이 46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 운동회, 마라톤, 육외 행사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어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 45명(23.7%), 논·밭 27명(14.2%) 순이었다. 발생시간은 오후 3시가 38명(20.0%)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135명(71.1%)으로 여자 55명(28.9%)보다 80명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32명(16.8%), 40대 31명(16.3%), 20대 26명(13.7%) 순이었으며 65세 이상은 39명(20.5%)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15명(60.5%)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 36명(18.9%), 열실신 19명(10.0%), 열경련 18명(9.5%), 기타 2명(1.1%) 순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를 발간하고 누리집 등에 게시했다.

건강수칙에 따르면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한 뒤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오후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쟁·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를 높아 열이 많은데다 체온조절기능

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자 있는 경우 더위로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어 장시간 노출을 피하고 운동 강도도 무더위 맨 평소보다 10~30% 낮춰야 한다.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하도록 한다.

온열질환자는 발견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어 시원한 물수건과 부채질 등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이때 수분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억지로 음료수를 먹이기 보다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은 방법이다.

정경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외작업자는 물론 미라톤 지역행사 등 실외행사 시 그늘막과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건강수칙을 사전에 안내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통신 재난 대비 복구 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국정원,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3일 서울 종로구 KT 혜화지사에서 테러로 인한 통신 재난 상황 대비 서비스 긴급복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공노광주남구 “청사 위탁개발비 상환 감사원 결과 수용” 촉구

“전·현직 구청장 책임 회피…주민들에 사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로 인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사의 공공성 후퇴와 함께 불요불급한 일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현직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량직한 모습은 아닌 만큼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지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지난 2011년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한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300여원대 비용을 남구가 상환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남구 운영담당자 A씨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2011년 6월 개발사업계획서 결재를 상신했고, 전임 구청장과 A씨의 상급자들은 상환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재했다고 밝혔다.

또 위탁개발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기존 입점업체 이전비(10억여원), 에스컬레이터 설치비(10억여원) 등 모두 24억9000만여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감사결과에 대해 "수탁기관으로서 일대 활성화와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캠코의 책임부분이 빠졌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내년 3월부터 온종일돌봄 제공된다

현행 '맞춤형 보육' 폐지로 내년 3월부터 맞벌이·홀벌이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집 이동에게 하루 7시간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시간', 등 온종일 12시간 돌봄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월부터 서울 동작구와 부산 동래구(대도시), 여수시(중소도시), 경기도 양평군(농어촌)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현재 만 0~2세 영아는 부모가 취업, 돌봄 등이 추가로 필요할 때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까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홀벌이 가정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하고 추가로 돌봄은 매월 15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3~5세는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보호자 수요에 따른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시간별로 전담교사를 별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기본보육 시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를 연장보육시간으로 설정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1개반당 1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이로써 담임교사는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보장 원칙을 보장받게 됐다. 기본보육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보육을 맡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진 뒤 오후 5시부터 1시간 행정업무와 다음날 보육업무 준비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이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연장보육반을 운영해야 하는 건 아니다. 보육반 운영 유무는 장시간 보육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시범사업에서 장시간 보육 수요는 20% 수준이었다. 참여 어린이집 영유아 5772명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해 189개 연장반이 운영 중이다. 현재 종일반 자격 증빙을 한 비율은 70.3%에 비해 실제수요는 적은 편이다.

지난해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추가 보육 수요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뉴시스



이런판결 저런판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비자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전국 13개 소송…현재 승소 1건

법인 인강 과상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은 이 사건 포함 총 13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김모씨 등 869명이 낸 소송만 지난 2017년 6월 인천지법에서 승소하고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모두 패소한 상태다.

당시 인천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흥기찬)는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된 한전의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누진제 단체소송을 이끄는 법무

뉴시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우리 미숙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라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번에는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미리 미리 걱정 안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품선터 123 |

건강IN

건강한 행복, 건강한 생활